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4
----------	----

발의연월일 : 2020. 6. 1.

발 의 자 : 박완주 · 한준호 · 문진석

정춘숙 · 이정문 · 오영훈

민홍철 · 변재일 · 김정호

우원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1995년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을 반영하고 새로운 시대에 걸 맞는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해당 개정안은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하여 특례시에 사무, 행정 기구 및 정원, 재정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이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사무처리 및 행정·재정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하여 지방자치 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안된 것이라 볼 수 있음.

하지만 해당 개정안은 특례시 기준 요건으로 사회경제적 요인 및 지역적 특수성 등 다양한 기준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인구 규모만을 규정하고 있어,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수도권 과밀화 및 지역 간

차별과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문제를 유발할 수 있음.

이에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특례시 인구기준을 구분하여 수도권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및 행정수요가 100만이상인 대도시, 비수도권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인 경우에 특례시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고, 특례시 인정기준에 인구 기준뿐만 아니라 행정·재정·경제 요건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5조제1항 및 제2항).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중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 및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인구 100만 이상인 대도시
 2. 경기도에 위치한 인구 50만 이상인 도시로서 행정수요, 국가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수요가 100만 이상인 대도시
 3. 경기도에 위치하지 아니한 도시로서 인구 50만 이상인 대도시
- ② 특례시의 인정기준 및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인구에 대한 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특례시의 인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재정·행정 요건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75조(대도시에 대한 특례인정)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u>인구 50만 이상 대도시</u> 의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하여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제175조(대도시에 대한 특례인정) ① ----- -----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도시</u> <u>(이하 “특례시”라 한다)</u> 및 <u>인구 50만 이상 대도시</u> ----- ----- -----.
<신 설>	1. <u>인구 100만 이상인 대도시</u>
<신 설>	2. <u>경기도에 위치한 인구 50만 이상인 도시로서 행정수요, 국가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수요가 100만 이상인 대도시</u>
<신 설>	3. <u>경기도에 위치하지 아니한 도시로서 인구 50만 이상인 대도시</u>
<신 설>	② <u>특례시의 인정기준 및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인구에 대한 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특례시의 인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재정·행정</u>

	<u>요건을 고려하여 정한다.</u>
--	----------------------